

투데이 칼럼

어떻게 하면 검찰권 남용을 막을 수 있을까?

작금의 민심은 검찰개혁의 요구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확실한 것은 검찰권 남용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눈에 검찰권이 대한민국 최상의 권력, 대통령을 능가하는,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어떤 짓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표적수사, 먼지털기 식 수사, 무제한의 강제수사 등 조국이 아닌 누구에게라도 가해질 수 있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선택적 정의(?)다.

그렇다면 어떻게 검찰권 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우선 수사 기소 분리원칙을 철저히 제도화하여, 검찰의 형사절차에서의 권력집중을 견제와 균형을 원리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검찰개혁이다.

“검할 없어도 되겠다”

국감에 출석해 임은정 부장검사가 한 말이다. 이 정도의 기개와 현실 감각이 있어야 검찰개혁이 가능하다 여겨진다.

“제가 의정부지검에 있을 때, 검사 계시관에 “검사 부직격자들이 검사장도 되고, 검찰총장도 되는 것을 우리는 더러 보지 않았습니까?”라 썼다가, 조희진 검사장한테 불러가 부직격자 검사장과 총장이 누구냐고 추궁 받았지요. 윤 총장님이 검찰 간부들 중에는



박보경

칼럼니스트 겸 여행작가

간단과 기개가 그래도 있어 간부들 사이에서 빛나는 선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때, 국정원 간부들과 직원들이 기소 유예와 입건유예를 하는 등의 수사 결과 보도 자료를 읽으며, 현실을 잘 아는 검사로서 부득이 타협에 한탄하였고, 교과서적인 검사 상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자올 수 없었지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가 부족했었니까요.

조국 장관과 그 일가 사건 기록을 보지 않은 저로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드러난 몇 가지 팩트들, 검찰의 조직적 범죄 은폐사건인 재 고발사건을 1년 4개월째 동간, 검사의 공문서위조는 경정계사안이고 형사입건 대상도 아니라고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그 중앙지검이 특수부에서 자소서 한줄 한 줄을 압수수색으로 확인하고, 첨예하게 주장이 대립하는 사문서위조사건을 피의자 조사 없이 청문회 날 전격 기소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검

찰이 수사로 정치와 장관 인사에 개입한 것이라는 결론이 논리의 비약이라 할 수 있을까요?

국감장에서 제 생각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이 국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 가감없이 말하다가, 동료들의 가슴에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그래도, 제 생각과 다른 말을 할 수 없어서 솔직하게 말하고 왔습니다.

향명과등을 일으키고, 징계를 받아 곳곳을 전전하며 검찰의 가장 초라한 현실을 눈으로 보고 느낀 한 생존자의 증언이 국민들과 동료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은정 검사, 이렇게 소신이 뚜렷하고 지속적으로 조직의 불의에 저항하는 강골 검사를 나는 본 적이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가 부러워하는 검찰개혁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시대가 변하고 새로운 시스템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검찰개혁은 이런 연장선에서 전

면적으로 다시 조정되어야 옳다. 이제 우리도 과감하게 구태를 벗어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수평적 사회로 변해야 한다. 그것이 모두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지금 같은 수직 구조는 경쟁력이 있을 수 없으며 차별을 심화시키고 계급화한다. 매우 비생산적인 직장문화가 아닌가? 어떻게 나이 든 사법인이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나? 사법의 달란트는 서로 매우 다르다. 연공서열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직분과 일이 배분되는 게 생산성을 위해 합리적이고 옳다. 그리고 그 어떤 일도 필요하지 않은 건 없다. 그러나 좋고 나쁨이 없고 귀하고 천한 게 없는 것. 이런 문화가 오래가 되어야 비로소 사회가 차별이 사라지고 인정이 되는 것이다.

검사동일체, 전관예우 등 검사조직은 매우 특별한 그들만의 문화가 깊이 고착되어 있다. 그래서 한 번 눈 밖에 내면 조직 내에서는 물론, 사퇴 후 변호사 개업을 해도 불이익은 사라지지 않는다. 한마디로 사회에서 ‘배장’ 되는 것이다. 임은정, 사직현, 안미현 검사는 이 모든 불이익을 감안하고 ‘정의’를 위해 검찰 내에서 불의에 반기를 든 사법들이다. 마땅히 우리가 이들을 보호하고 보듬어야 옳다. 그 과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이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역시 관심을 갖고 적소에 대응해야 옳다. 그런 인사가 개혁의 시작이다.

사설

농촌진흥청도 지역발전에 동참해야

지역 발전이 항상 중심 주제가 돼야 했다. 전북도에게 하는 말만은 아니다. 공공기관들에게도 주는 말이다. 그리고 각 시군 지자체의 관계자들에게도 주는 말이다. 함께 뛰어야 한다고 주문하는 이유는 분명하다.전북 지역은 다른 광역시도보다 발전이 더디다. 터덕거리는 현안들이 언제나 성취될지 관심이 큰 이유는 그 때문이다. 전북도가 앞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말해도 뒤에서 다른 공공기관들이 비협조적으로 손을 놓고 있으면 지역발전은 요원하다.

지역의 문제는 전북도만 이끌어가는 게 아니다. 도민들이 오래도록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들이 제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라고 있거니와 지역 발전 관심사에는 너와나의 구분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혁신 도시내에서 중추적 기관이 될 수 있는 농촌진흥청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그 역할을 다 해주기 기대했는데 여태 변화된 것이 별로 없다. 2015년 수원에서 전북으로 이전한 이후 물 위의 기름처럼 겹돌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농촌진흥청에 주문하는 바는 그

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도민들이 농촌진흥청에 바라는 것은 소박하다. 일거리가 생기면 먼저 지역을 생각해달라는 것이다. 그 일거리를 전북 지역의 기업들에 맡겨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까지 농촌진흥청은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 이번에도 다른 쪽 특정 업체에 수의 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그해서는 곤란하다. 농촌진흥청이 지역사회의 고민거리가 돼선 안 된다. 도내 기업들이 농촌진흥청을 두고 보통 섭섭해 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 발전이 항상 중심 주제가 돼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마음을 넓혀야 한다.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고 할 수가 없다. 지역에 돈이 안 돌고 있는 지금, 다들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만으로는 2% 부족한 나날이다.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이들은 도내에 일거리를 주어야 한다. 그래서 돈이 돌게 해야만 한다.

영세 기업들에 관심과 지원 있어야

전북도가 도내 작은 기업들에 관심을 가져야 했다. 그동안 영세한 기업들로부터 이런저런 호소가 있었으니 말이다. 도민들은 전북도가 어떻게 지원할지 지켜보고 있다. 기업이 잘 나가야 경제도 나아지고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현장의 애로 사항을 경청하고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했으므로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 실천해야 한다.

우선 도내 기업들의 생존률이 어떤지 파악해야 했다. 전국 최하위라는 보고가 계속됐는데 긍정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아직도 볼 수가 없다. 지금도 군산 경제의 물락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새삼스럽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전북도가 중심을 잡고 일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의 급한 현안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당부는 저번에도 했던 바이다. 도내 기업들의 생존률 통계 보고를 보면 그동안 도내 작은 기업들이 얼마나 험난한 세월을 보냈는지 알 수가 있다. 전북도는 지역의 영세 기업들을

연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중소기업들 쪽에서도 밝은 소식이 전혀 들리지 않고 있는 요즘이다. 그동안 중소 영세기업들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별로 달라진 게 없으니 그럴 터이다. 전북도는 지역 경제의 흐름이 어려울수록 기업들의 형편을 살펴야 한다. 늘 그랬거니와 돈이 돌지 않는 전북 경제는 정체된 상태이다. 전북도가 군산 살리기를 주요 현안으로 내세우고 있기에 하는 말인데 그쪽 하도급 업체 등 영세기업들의 형편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전북도는 기업 생존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중소영세기업들도 지역 경제를 받쳐주는데 그 역할이 컸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도내 중소기업들과 영세기업들이 그동안 애써 일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예전처럼 작은 인센티브를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도내 영세 기업들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전북도는 도내 영세 기업들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기고문

전동 키보드 안전운행 생활백서

최근 교통수단이 발전하면서 젊은 층 사이에서는 전동 키보드가 성행하고 있다.

전동 키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로 분류되며, 전동기를 부착하고 근거리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다.

전동 키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져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전동 키보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전동 키보드는 과연 무엇일까? 전동 키보드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전동 키보드는 도로교통법 2조에 의해 ‘차’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차의 일종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면허 소지한

사람에 한해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동 키보드를 운행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증이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6세 이상 면허를 소지할 수 있으며, 무면허 운행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형에 처할 수 있으니 꼭 면허 소지 후 운행해야 한다.

또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 시 안전모를 착용한 후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전동 키보드 운행 시 안전모 착용 후 운행해야 한다.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되며 명심하자. 전동 키보드는 크게 보면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읍·군·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차도로



김민지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만 주행해야 한다. 인도나 자전거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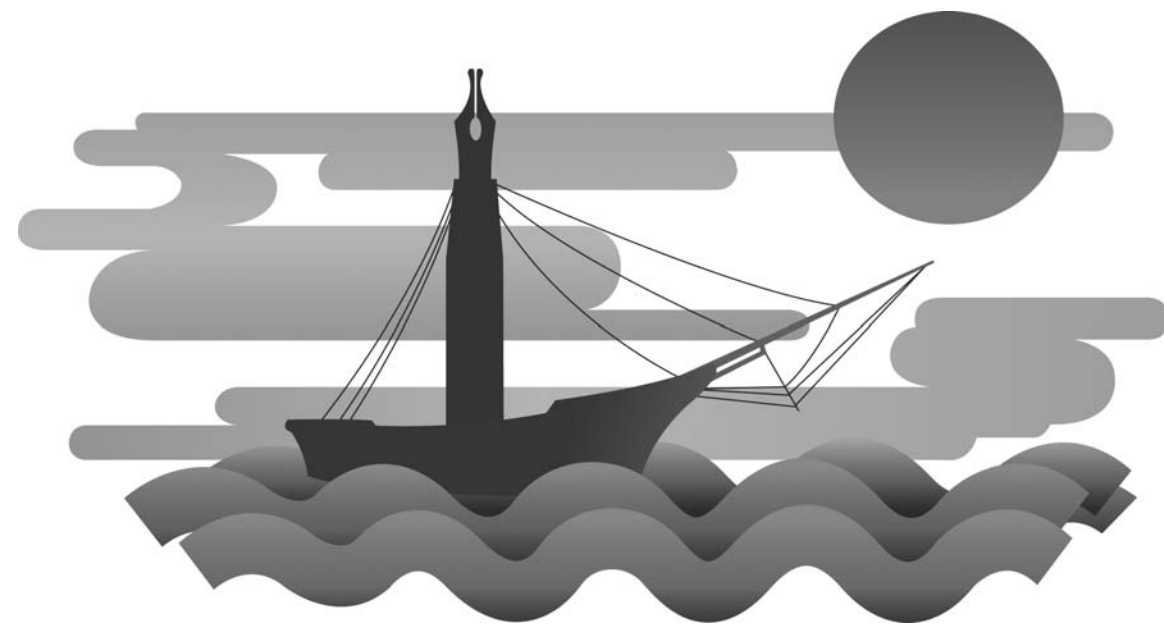
로는 주행할 수 없으며 인도나 자전거도로로 주행하다 적발 시 범칙금 4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 주의하자.

작년 전국 기준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7만5000대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빠르고 간편히 운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운행자는 안전수칙을 모르고 타는 경우가 허다하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키보드, 세그웨이, 원형 등)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면허를 꼭 소지하고 안전모 착용 후 운행해야 사고예방을 막을 수 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도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